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칸트가 ‘월간 베를린’에 기고한 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은 이렇게 시작된다. “계몽이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때, 그 미성숙 상태는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계몽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과감히 알라고 하라!’ 당신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오늘날 ‘계몽’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하

권력 감수성에 대하여

게 느껴진다. 심지어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런 말조차도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정도다. 계몽주의의 역사화·지식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대적 계몽의 가치가 각종 반근대·탈근대주의에 의해 이론적 탄핵을 받은 바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신’과 ‘무지’를 먹고 사는 가짜 권위를 몰아내기 위해 ‘이성’과 ‘실증’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것이 계몽주의라면, 미신과 무지가 잔존하는 사회는 여전히 계몽기를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위 문장에 역사적 유통 기한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말을 언제나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그가 18세기 말에 요청한 것은 지성이었고 또 그 지성을 사용할 줄 아는 용기였는데, 여전히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저 문장에서 ‘지성’(understanding)의 자리에 ‘감수성’(sensitivity)을 넣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성숙한’(즉, 계몽되지 못한) 인간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명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감수성인 것 같아서다. 비가 오면 울적해지고 슬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감수성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성숙한(계몽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즉 ‘무지’와 ‘미신’)이 ‘차별’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비판할 줄 아는 민감함을 의미한다.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성-인지’라고 번역되기도 한다)이나 ‘인권 감수성’이라는 개념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감수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 ‘권력 감수성’(pow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를 덧붙여 보고 싶다. (검색해 보니 사용된 전례가 드물게나마 있다. 당연히 이 개념의 저작권은 나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재빨리 파악해서 ‘줄을 잘 서는’ 예민함이 아니다. 언제나 평등해야 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상대적 권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섬세하게 인지하고, 행여 그 가능성이 가시적·폭력적으로 드러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태를 차단할 줄 아는 민감성이다. 권력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내가 우월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대등한’ 관계의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어느 대선 후보가 TV에 나와서는 영커의 불편한 질문에 견들거림과 이죽거림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한 기분을 느낀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어떤 누구를 만나든 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다. 대체로 늘 우월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고, 상대 방에게 견들거리고 이죽거려도 되는 그 권력을 누려 왔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감수성은 말과 행동에서야 확연히 드러나지만 권력 감수성은 표정에서부터 잘 감춰지지 않는다. 바라건대, 그의 얼굴을 보는 일이 괴롭지 않은, 즉 권력 감수성이 높은 그런 대통령이 탄생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 주기를.

종교칼럼



원목 선덕사 주지

훌륭한 정치인의 기준

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다시금 증명됐다. 헌정사상 첫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대통령 선거,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을 화합시킬 수 있고, 정치 경제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후보자의 바른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검증 지점이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고 참되며, 민을만하고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고. 협담을 하지 않고 협담을 삼가며, 이들에게 들은 것을 저들에게 알려 같듯하게 하지 않는다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듣기 좋고 사랑이 넘치며 우월하고 정중함,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즐겨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때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의미 있는 말, 이치에 맞는 말, 규범에 맞는 말을 시의 적절하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갖추어 써주게끔 말한다오.”(갈파하는 마음의 소멸 큰경)

괘변이라 할 만큼 현란하게 말을 바꾸고, 네거티브에 열중하는 정치인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실수는 몇몇이 인정하고, 상대 후보의 훌륭한 점은

칭찬해주는 용기와 아량이 큰 정치인은 시간이 갈수록 빛나게 된다.

붓다는 정부의 우두머리, 즉 왕과 관리들이 부패하고 공정치 없으면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행해진다고 했다. 붓다가 가르친 왕의 열 가지 의무(十王法)를 통해 정치인의 덕목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자선(布施)이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는 부와 재산에 열광을 품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분배하여야 한다. 둘째로 훌륭한 도덕성(持戒)이다. 생명을 파괴한다거나, 속이거나, 훔치거나, 남을 착취하거나, 간통을 범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맑은 정신을 해치는 음료를 마시는 등의 짓을 결코 하지 않는다.

셋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다(承擔). 정치인과 고위관료는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모든 개인적 안락과 명예와 명성 그리고 고 심지여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넷째는 정직과 성실(正直)이다. 법을 시행할 때 두려움이나 편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의도가 솔직해야하며 대중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는 친절과 온화함(柔和)이다. 지도자는 관용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 여섯째는 엄격한 생활수관(苦行)이다. 소박한 생활을 하며, 사치를 탐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는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일곱째는 미움, 악의, 적의로부터 벗어나는 것(無惡)이다. 지도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는 비폭력(不害)이다. 정치인과 고위관료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 그리고 폭력과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피하고 막아서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아홉째는 인내, 견뎌, 포용력, 이해심(忍慈)이다. 지도자는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모욕을, 성품을 상하지 말고 기꺼이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열째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민의 이익을 가로막지 않는 것(不相違)이다.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의 복지를 어떻게든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정치인과 고위관료는 국민과 화합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의 국가 운영 윤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누가 이 윤리에 가장 부합하는가? 꼼꼼히 챙겨볼 일이다.

기고



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

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우리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언제나 의로운 가치와 정서로 구현하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한 도시다. 광주의 희생과 헌신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 가치를 지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광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돼 경제적인 낙후를 면치 못했다.

민선6기 광주시는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 콘텐츠 신산업 등 3대 밸리 조성·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제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역동적인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외와 낙후를 극복함으로써 광주의 아들·딸들이 더 이상은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는 몸부림이라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민선6기 기본 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언론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적절한 선택이자 방향이라고 동의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사실 광주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제19대 대선을 지역 미래를 선도할 대형프로젝트 가동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85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미래비전 자문단’을 발족시켜 운영해 왔다. 이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적 싱크탱크 광주전남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수십차례의 회의와 열린 토론회를 거치면서 공약 발굴에 매진했다.

지난 3월 14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각 정당에 광주지역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 미래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광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6대 분야 17개 공약과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위한 7개 상상과제를 추가해 총 7대 분야, 24개의 대선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광주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선도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사업으로 심각하게 축소·왜곡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원상회복해 차기정부에서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광주 군공항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전해 이곳에 신산업 축(軸)이 융복합되는 신성장 산업밸리로 조성하고,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광주-대전-대구를 잇는 내륙 삼각 국가 철도망을 조성해 균형발전을

촉진할 초광역 기간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국고수 발표를 통해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가 확인된 만큼 최초 발표 명령자를 포함한 5·18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여 정부 보고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각 당의 후보 경선에서도 같이 본선에서도 유력한 후보들이 앞 다퉈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광주는 이름과 당당했던 만큼 너그러워 살 만한 도시,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도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그런데 역대정권에서 약속했던 수많은 장비 및 공약들은 허공의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을 뿐이다. 국정농단에 정신 팔려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0% 초반에 머무르고 말았다.

내년은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이다. 광주시는 전라도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광주-전남 시대민의 뜻을 담아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지난 세기 광주의 선택에 대한 민족의 미래를 바꾼 것처럼, 이번엔 광주가 고민해 만든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준비한 공약들이 채택돼 새 정부의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길 희망한다.

社說

5·18 왜곡 막는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전두환 회고록 망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발포 명령이란 것은 없었다’ “광주사태 때 북한 특수요원들 다수가 시위대 속에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는 등 망언을 쏟아냈다.

김홍식 5·18부상자회장은 “37년 만에 다시 쿠데타를 당한 느낌이다”라며 광주 시민들의 감정을 대변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세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엇그제 전두환을 지도 모르겠다. 대체로 늘 우월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고, 상대 방에게 견들거리고 이죽거려도 되는 그 권력을 누려 왔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감수성은 말과 행동에서야 확연히 드러나지만 권력 감수성은 표정에서부터 잘 감춰지지 않는다. 바라건대, 그의 얼굴을 보는 일이 괴롭지 않은, 즉 권력 감수성이 높은 그런 대통령이 탄생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 주기를.

5·18 망언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다. 5·18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5·18민중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했다면 전두환 회고록은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1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원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법안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옛 새누리당 측의 반발이 심했던 탓”이라며 “대통령 선거 후 국민 의당이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겠다”고 전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5·18은 폭동’이라 주장하는 전두환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치권은 서둘러 5·18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세월호 아픔 겪는 ‘진도의 눈물’ 어찌하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진도군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진도 지역에 3년째 관광산업 위축, 특산물 소비 부진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지 역경제 손실액만 898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해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 유출로 동·서거차도 전체 16개 어가가 잠정 추산 17억89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미역·조개류·해삼 양식장 피해 면적은 391.2ha에 달한다. 윤림산방 등 진도 지역 7개 유료 관광지 입장객 수도 참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도군은 어업생산력 증대 관련 국비 사업 6건, 전체 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조도면 일대 해조류 양식 기반사업비 60억 원을 비롯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량항 일대

에 활선어 회선터(50억 원)를 건립하는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열악한 지역 재정 여건상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 불가능한 현안이다.

진도 군민은 참사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현장에 먼저 달려가 탐사자료를 구조한 의인도,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한 이도 모두 진도 군민이다. 그 세월이 무려 3년째다. 이제 세월호가 물으로 올라오는 만큼 진도 수도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직무유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섰던 진도 군민에게 이제 정부가 보답해야 할 차례다. 경기침체로 침몰 위기에 놓인 진도 경제를 인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도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진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됐다.

無等鼓

‘사람은 모두 똑같다’는 말처럼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드러내 놓고 얼굴을 찡그리지는 못하지만, 손에 잡은 권력 그리고 금고 속에 가득 찬 돈을 머릿속에서 계산하며 “그래도 나는 다르다”라고 외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터다.

인권이 깡그리 무시되던 시절, 권력자들이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신격화’다. 결국 높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뚫고 알면서도 ‘나는 나와 다르다’라고 강변하려면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최고

신격화(神格化)

방법이기 때문이다. “비 오면 동굴 안에서 그들과 풀을 썰고, 저녁엔 가족들을 돌봤다. (중략) 그때 나는 밀 200근(100kg)을 짊어지고 어깨도 바루지 않으면서 10리(4km) 산길을 가곤 했다”는 게 발언의 요지다. 물론 서 주석이 이 발언을 방영도 하지한 것은 아닐 테지만, 관영방송이 앞서서 권력자 우상화의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괴인 권력”을 유지하고픈 욕심,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권력자에 빌붙은 측근들도 ‘낮부끄러운’ 신격화 작업에 한몫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시진핑 주석 우상화’ 논란도 과거의 신격화 사례와 비교해 보면 그 방식이나 확산 과정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해 말부터 시 주석의 과거 발언과 관련 자료들을 모은 다큐멘터리 ‘초심’을 방영

했다. CCTV는 방송에서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의 한 산골에서 지내던 당시를 묘사한 시 주석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비 오면 동굴 안에서 그들과 풀을 썰고, 저녁엔 가족들을 돌봤다. (중략) 그때 나는 밀 200근(100kg)을 짊어지고 어깨도 바루지 않으면서 10리(4km) 산길을 가곤 했다”는 게 발언의 요지다. 물론 서 주석이 이 발언을 방영도

하지한 것은 아닐 테지만, 관영방송이 앞서서 권력자 우상화의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지적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역사상 동·서양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했지만, 기껏해야 10여 년 권력을 휘둘렀을 뿐 남은 것은 허명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요즘에도 북한을 비롯한 극히 일부 지역에서 권력자에 대한 신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G2로 떠오른 중국에서 ‘신격화 논란’이 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 대한 무질제한 ‘사드 보복’이 중국의 지난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짚어봐야 할 것 같다.

/홍형기 사회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00161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시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